

'사회적 거리두기' 범도민 운동 전개

전북도, '전염의 위험은 멀리,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슬로건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 위해 추진

전북도가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로 표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도민 스스로 참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범도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전염의 위험은 멀리,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라는 슬로건 아래 비말이나 손으로 전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해 감염 전파를 막거나 느리게 하기 위해 착안됐다.

이는 전북도가 각종 행사의 연기·취소 노력과 각계각층의 다중집회 등

자체 동참에 더해 도민들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더 작은 희생으로 더 빨리 코로나19 없는 청정전북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범도민 운동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해 분야별 실천수칙을 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유연근무, 영상회의, 모바일을 통한 교육, 입산부의 육아휴직을 장려한다. 학원은 휴원을 권고, 학교 주변 PC방, 노래연습장, 카페, 민화방은 영업장 자체 소독과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을 준수토록 한다.

종교 등 각종 집회·행사, 단체 모

임, 집합교육 등도 금지한다.

요양병원, 요양원, 경로당, 주야간 보호시설, 노인복지관 등 노인집단시설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는 가급적 출·퇴근 자제, 외부인 면회를 금지토록 한다.

역, 터미널, 대중교통, 백화점, 병원,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역 소독을 하고, 소독제·방역 약품을 비치한다.

부득이,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는 최소한 2m이상의 거리두기를 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수칙으로는 ▲(집으로 귀가할 때) 외투 털고 들어오기, 들어오자마자 손씻기 ▲(거정에서는) 식사 시 국물음식 같이 떠먹지 않기 ▲(회사에서

는) 악수는 팔꿈치로, 비대면 식사, 회의할 때 마스크 쓰기 등의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엘리베이터에서는) 마스크 필수, 버튼이나 난간을 만진 후엔 손씻기 ▲(기타) 복사기, 전화기 등 버튼 소독, 출입문은 팔꿈치로 열기 ▲개인용품 중 휴대폰은 알코올로 닦기, PC키보드 커버씩우기 등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당장은 소상공인 등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조기 종식을 견인해 오히려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국민 10명 중 4명 마스크 수급 정책 지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현행 공적 공급 80%' 40.7%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부가 마스크 수급 정책을 현재처럼 80% 공적 공급 시스템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한 결과 '현행 공적 공급 80%'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시적 무상배급'이 31.3%, '시장 기능에 맡김'이 15.9%를 차지했다. 모름·무응답은 12.1%였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공적 공급 80%'에 대해 경기·인천(49.8%)에서 많이 선택했다. 30대(66.0%)와 40대(51.2%)에서도 다수였다. '한시적 무상배급' 응답은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47.7%, 연령별로는 50대(41.0%), 60세 이상(37.9%)에서 많았다.

자신을 진보층이라 대답한 이들 중 46.9%는 '현행 공적 공급 80%'를 뽑았고, '한시적 무상배급'은 31.9%로 나타났다. '시장 기능에 맡김'은 13.0%였다.

반면 보수층은 '한시적 무상배급'이 41.2%를 차지했고, '시장 기능에 맡김'도 30.3%로 뒤를 이었다. 반면 '현행 공적 공급 80%'는 19.9%에 그쳤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현행 공적 공급 80%'에 대해 57.1%, '한시적 무상배급'은 24.3%, '시장기능에 맡김'은 9.9%였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시적 무상배급'이 38.9%로 가장 많았고, '시장 기능에 맡김' (27.7%), '현행 공적 공급 80%' (22.5%)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8843명에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5.7%)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

정부 "코로나19 확산 빠른 외국 특별입국절차 확대 검토"

우리 정부가 중국과 홍콩, 마카오 입국자에 적용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빠른 여타 국가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90개국에 남는 나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확산의 속도가 열려질 정도로 빠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중국에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대규모의 감염 사례를 경험해본 유일한 나라"라며 "저희의 경험과 통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외국의 조치들을 보고 있으면 열려되는 것이 있다. 조기에 환자를 빨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치료하고 경증보다 중증환자의 치료를 집중해 치명률을 낮추는 부분 등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평가해 만약 외국의 감염 상황이 좀더 확대된다면 (우리도) 추가 유입을 통한 국내의 감염 확산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같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다. 중국 후베이성처럼 입국을 금지하거나 중국·홍콩·마카오에 적용하는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진다. /뉴스



수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민단체, 나경원 11번째 고발... "채용 의혹 등 수사하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스페셜을 리포코리아(SOK) 회장 재임 시절 채용·예산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나 의원에 대한 11번째 고발에 나섰다.

9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의원과 SOK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업무방해·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나 의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허위정보 및 명예훼손·음해성 문자메시지들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감사 결과 나 의원이 SOK와 관련해서만 무려 15건의 비리 및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어떻게 자신과 관련한 모든 비리가 허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며 "나 의원은 비리 문제를 뿐만 아니라 허위 문자메시지와 SNS 허위 글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 의원의 딸이 SOK 당원직 이사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는 것, SOK국 제본부의 글로벌 메신저로 선임된 것도 모두 관련 법이나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문체부의 SOK 관련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나 의원 등을 11차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11차 고발은 그동안 검찰의 지극한 직무유기에 강하게 항의하고,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경찰에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코로나19 발생 현황' 1회 발표

일본, 오늘부터 오전 10시에 당일 0시 기준

방역 당국이 기존에 하루 2회 제공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 발생 현황을 10일부터 오전 10시에만 당일 오전 0시 기준으로 한 번만 발표한다.

이는 국내외 발표 통계 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통계 발표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앞서 "10일부터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서 24시간 기준 집계 현황을 오전 10시에 한번 발표드리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또 정부에서도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와 같은 정보를 일일보고 받는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망자 발생 시에만 정부에 세부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밝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에도 일일보고하는 형태로 브리핑 때 드리는 자료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며 "그 이외의 별도 통계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같은 보고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망자 발생했을 때는 사망 정보를 그때 그때 세부내용을 저희가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횟수 축소를 국민의 알권리가 저하된다는 지적에 정 본부장은 "예전에 한 두 케이스가 나왔을 때엔 세밀한 정보를 드렸지만 지금은 많은 지자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매우 세밀한 정보까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일까지는 오전 10시(오전 9시 기준), 오후 5시(오후 4시 기준) 등 하루에 두 차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사망자, 검사 대상 건수, 지역 및 국가별 통계 등을 공개해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당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현황을 자세하게 공개했다. 대신 오후 5시에 당일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수만 공개해 왔다.

그 당시 당국에 따르면 간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서 낮 동안 환자를 지역별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특히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자에 번호를 붙이고 재분류해야 하는데 지역 발생 환자 대응 및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지역 보건소의 여건에서 통계에 집중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